

2020-제2호 카드뉴스

쉽게 읽는 인권 이야기

동선공개, 내 사생활이 알려질까 두려워요.

김지은, 정승환 | 연세 인권 앰배서더 3기

전무후무한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각국의
방역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신용카드와 CCTV를 이용해
감염자의 동선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보다 훌륭한
방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1항: 국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한다.

그 결과, 코로나19의 영향이 일부 고려된 2020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작년에 비해 5단계 상향 조정되는 등, 한국의 'K-방역'은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순위	국가	'19순위	변동
1	싱가폴	1	0
2	덴마크	8	6
3	스위스	4	1
⋮			
22	뉴질랜드	21	△1
23	한국	28	5
24	사우디아라비아	26	2

그런데, 일면에서는 이 동선 공개가
감염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동선공개



믿음회원 1:1 채팅

2020.03.13. 17:54 조회 373

코로나 걸려서 동선공개되어 정신과 다닌거 알려질까봐 겁나네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사생활 침해인가?](#) 2020.03.09.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의 동선 공개 문제를 두고 논란이... 세부적인 동선 공개가 확진 환자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인권

blog.naver.com/

블로그 내 검색

**실제로, 대구
31번 확진자의
경우에는 도를
넘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31번
확진자의 신상
관련 사진’이라며
가짜뉴스가
떠돌았고,**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사진,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 신상 관련 사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송 대상]



위 사진과 관련하여 대구시청 확인 결과,

31번째 확진자는 전혀 무관한 사진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혐의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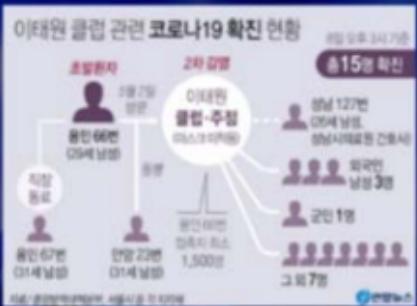
코로나19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는 최초 생신자뿐만 아니라 증간유로저까지 추적·감거에 영향대응합니다.

심각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예기할 수 있으니,
확산 방지에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20일

대구지방경찰청

또 한번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이태원 단체감염
사태는
성소수자의
‘아웃링’ 문제와
얽히면서 더욱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독일의 공영방송에서는 “한국의 동선공개 과정에서 한 남성이 ‘게이 클럽’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동성애자들의 신상 정보를 강제로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 또한 “현재와 같이 모든 확진환자에 대한 상세한 이동경로를 공개하는 것은 의심증상자가 자진 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2020 THE KOREAN DAILY
THE KOREAN DAILY © 2020

© 2020 THE KOREAN DAILY
THE KOREAN DAILY © 2020



누군가의 세부 동선과 신상 같은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데,
예를 하나 들죠. 최근의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의 중심에 있는 한
남성이 서울의 ‘게이 클럽’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사생활 보호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일부 SNS 사용자들은 게이 바와 클럽 영상을 올리고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이런 워모스러운 상황을 즐식시키자”며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SaferZone @SarahKellyOfficial

© 2020 THE KOREAN DAILY
THE KOREAN DAILY © 2020



인권 단체들은 그 사람과 접촉했던 동성애자의 신상 정보가 강제

용납될 수 있는 건가요?

이를 고려해, 정부에서도 동선공개의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별, 연령, 국적, 주소 등 추가 감염의 가능성과 무관한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방역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7월 발표된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중 주요 변경사항

1. 성별, 연령, 거주지, 직장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2.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 형태가 아닌 ‘장소 목록 형태’로 공개함.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 일시, 소독 여부 등 포함)
3. 집단발생 관련 ‘반복 대량 노출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므로 지자체에서 별도로 공개하지 않음.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더불어, 동선공개로 노출된 사생활이
야기하는 2차 피해는 코로나19로 힘든
확진자에게 마음의 상처까지 남기고
있습니다.

- 2020.05.09. 10:32
와와와 누나나 동생이나 마마마마마마 이 시국에 동생놈은 게이클럽 가고 누나년은 코인노
래방에 댄스 연습실마마마마마마마마 여러분 가정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마
답글 25 ⚡ 882 ⚡ 179
- 2020.05.09. 10:33
언페도 이런 면페가 따로없네
답글 9 ⚡ 333 ⚡ 5
- 2020.05.09. 10:37
오지게도 차다녔데...
답글 4 ⚡ 234 ⚡ 2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꾸준히 고안해야 합니다.
국민들 또한 과도한 비난은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힘든 코로나19 사태!
안전과 함께 인권 보호 또한
고려되어야 할 시점입니다.